

강가·해변 인근 공영주차장 암체 차박족 '기승'

야영·취사행위... 장기주차 사례도 화재·사고위험, 쓰레기 투기 빈번 각종 소음발생 등 주민 불편 겪어 지자체 "적극적인 계도·단속 노력"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남지역 해변과 강가 등에는 차량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차박'을 하기 위한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여행객들은 공영주차장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야영, 취사를 하기도 해 인근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지자체는 적극적인 계도·단속을 통해 공영주차장 내 불법 차박 행위를 근절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찾은 장성 황룡강 인근 공영주차장. 직장인들의 퇴근 시간이 지나자, 차박을 하기 위한 여행객들의 차량이 몰려들었다.

저마다 차량용 텐트와 간이 의자 등 각종 캠핑용품과 꺼내 강가에 자리를 잡은 여행객들은 가스버너로 고기를 굽거나, 음식을 조리하는 등 식사 준비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였다.

아예 장작을 태우는 통을 가져와서 불을 지피는 이들도 많아 대형 화재 발생이 우려됐다.

같은 날 찾은 화순 화순전 일대 공영주차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조명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가까운 곳부터 차례로 차량이 들어섰다. 장기간 주차된 것으



최근 장성 황룡강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일부 야영객들이 장작을 피우고 야영을 하고 있다.

로 보이는 캠핑카를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등 주차장 일부를 개인 '별장' 처럼 사용하는 이들도 있었다.

주차장 내부에 설치된 쓰레기장에는 '차박족' 등 여행객들이 버리고 간 생활 쓰레기로 가득했다. 민가나 숙박시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음에도 밤늦은 시간까지 스피커로 음악소리를 크게 틀어놓는 등 소음이 끊이지 않았다.

주차장 곳곳에 무단 야영과 점용 행위를 금지하는 안내문이 걸려있었지만, 여행객들은 이에 개의치 않고 '암체' 차박을

즐기는 모습이였다. 이같이 가을을 맞아 전남지역 곳곳의 해변과 강가 인근 공영주차장에는 차박족이 끊이지 않아 인근 주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

화순에 거주하는 조모(25)씨는 "집 주변 공영주차장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차박 명소'로 소문이 나면서, 휴일이면 '차박족'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며 "주차장 여러 면을 점용해 야영하고, 심지어 캠핑카 등을 장기 주차해 두고 휴일마다 와서 사용하기도 하는 등 주차장이 무

료라는 점을 악용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차박족이 불을 이용해 야외에서 취사해 대형 화재가 일어나지 않을까 불안하다"며 "야영 중에 발생하는 쓰레기를 주차장이나 인근 주택가 등에 무단 투기하고 가는 경우도 잦고, 밤새 각종 소음도 끊이지 않아 불편도 크다"고 하소연했다.

그동안 공영주차장을 점용해 야영하는 경우 뚜렷한 단속규정이 없어 계도 조치 정도만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달 20일부터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돼 공영주차장 내에서 야영과 취사를 하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1차 30만원, 2차 40만원, 3차 50만원)가 부과될 수 있다.

지자체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악용해 무단 '알박기' 행태를 벌여왔던 캠핑차량 등도 다른 장소로 견인할 수 있는 법령도 마련됐다.

주차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30일 넘게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이동 명령을 내리거나, 견인할 수 있다.

지자체는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불법 차박행위 근절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남의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주차장 내 불법 야영 행위에 대한 단속 근거가 마련됐다"며 "민원이 지속 접수되는 곳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단속을 펼쳐 불법 야영 행위 근절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무단 '알박기' 캠핑카 등 장기간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당장 강제 견인 조치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초단체 관계자는 "관할 공영주차장 대부분에 차단기 등이 부재해 장기 주차를 입증하기 어렵고, 견인·보관비용에 대한 합의와 장비·인력이 부족하다"며 "구체적인 견인 수칙 마련 등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도 많다"고 설명했다.

글·사진=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내달 21일 학동 참사 책임자 항소심 선고

현대산업개발·하청·재하청 업체 등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정비 사업 4구역 철거 참사와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이 다음 달 21일 열린다. 참사 후 1년 4개월여만에 나왔던 1심 선고 후 항소심 제2회 2년여만이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지난 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학동 4구역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재하청 업체 백솔 등 법인 2곳과 각 업체 임직원, 감리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소홀로 지난해 6월 9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중인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을 무너뜨려 정차 중인 시내버스 탑승자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민천기 기자

앞선 1심에서는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60)씨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벌금 500만원, 공무부장 노모(60)씨와 안전부장 김모(59)씨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청업체인 한솔 현장소장 강모(31)씨는 징역 2년6개월, 재하청업체인 백솔 대표 조모(50)씨는 징역 3년6개월, 감리차모(62)씨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면 계약을 통한 하청업체인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52)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중인 신문 등 절차를 마친 하청업체 백솔과 다원이앤씨, 한솔 현장소장 2명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은 올해 8월 따로 열렸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을 다시 병합해 선고는 같은 날에 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은 오는 11월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민천기 기자

반려견 배설물 갈등... 이웃에 각목 휘두른 60대

반려견의 배설물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이웃을 각목으로 폭행한 60대 전직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됐다.

무안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A(69)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께 무안 삼향읍의 자택 앞에서 이웃 B(40·여)씨를 각목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반려견을 데리고 집 근처를 산책하던 중 B씨의 반려견이 A씨의 집 앞에 용변을 봤고, A씨가 불만을 표출하

면서 말다툼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마당에 있던 각목을 들고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10여년 전 목포 지역에서 근무했던 전직 경찰관인 것으로 조사됐다.

몸 등에 부상을 입은 B씨는 스스로 병원으로 이동해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와 이웃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윤준명 기자

광주MBC, 5·18 사옥 화재 관련 첫 공식 사과

김낙곤 사장 창사 60주년 기념식서 "오월 영령, 광주시민, 국민께 사죄"

광주MBC가 1980년 5월, 언론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공개 사과를 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정부 감시 아래 놓여 있던 언론이 책임을 반성하고 공개 사과를 한 것은 보기 드문 일로 꼽힌다.

김낙곤 광주MBC 사장은 지난 8일 사옥에서 열린 창사 6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당시 언론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고 광주 학살의 비극을 막지 못했다"며 "오월 영령과 광주시민, 국민들께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비록 그동안 말하지 못했지만 구성원들은 광주MBC가 시민들에 의해 불에 탄 직후부터 사죄의 마음을 간직한 채 남들보다 5·18 보도와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제작에 더 진심으로 노력해 왔다"며 "열과 성을 다해 5·18 진실 찾기에 남들보다 더 진정성이 있었기에 오늘날 지역민



김낙곤 광주MBC 사장이 8일 오후 사옥에서 열린 창사 6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사옥 화재에 대한 공개 사과를 하고 있다. 광주MBC 제공

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미진한 5·18 진상 규명과 부족한 광주 정신의 보편화를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며 "어느 무소불위의 권력일지라도 굴하지 않고 언론의 양심을 지켜나가겠다. 사회의 공기로써 사명을 다하고 진실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광주MBC는 1980년 5월19일 오후 7시 텔레비전 로컬 뉴스를 폐지하고 서울 뉴스를 수중계했으며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도 건전 가요나 가곡을 선곡했다. 이날 오후 전남북 계엄분소에서는 군중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무마용으로 광주 소재 각 방송사에 계엄분소장 발표문을 발송토록 했다.

언론 검열관은 보도 책임자 집으로 전화를 걸어 "장군들께서 방송국 협조가 형편없다고 한다"며 협박했으며, 이날 서독 분데스리가 프로축구 중계 화면에는 자막으로 발표문이 나갔다. 이후 시민들의 비난이 빗발쳤고 다음 날인 20일 오후 궁동에 있던 광주MBC는 불길에 휩싸였다.

시민들은 "계엄군은 물러가라", "관제 언론 MBC를 불태워라"라며 진실을 외면하는 광주MBC를 질타했으며, 이 화재로 사옥이 전소된 바 있다. 민천기 기자

신정훈 민주당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신 의원 "혐의 없음 소명하겠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선 과정에서 지역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권유·유도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사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

일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나주 지역 권리당원들을 상대로 당내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전화 참여 방법을 직접 설명하며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라'고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의원은 전화를 통한 경선 여론조사의 경우 '당신은 권리당원입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 전화가 끊어



지는 점을 직접 예를 들며 '권리당원이라고 물으면 아니다'고 말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상대 후보 측 고발장 내용과 당시 내용이 담긴 녹취록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검찰에 송치했다.

신정훈 의원은 "수사상황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면서 "혐의 없음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민천기 기자